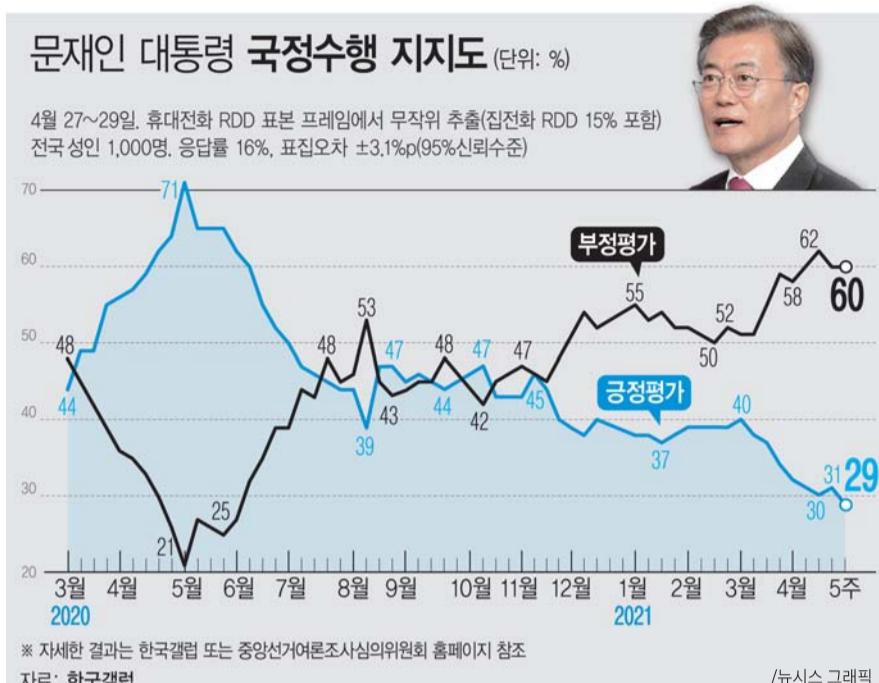


# 文 지지율 30% 붕괴에… 부동산·코로나19 등 현안점검

긍정평가 29%, 부정평가 60%  
부정평가 이유 28% ‘부동산정책’  
8개분야 중 복지제외 ‘부정평가’ 우세  
文, 부동산 안정화·백신외교 등 나서  
2030 민심 고려 ‘청년TF’ 구성도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으로 가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30%대가 깨진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면서도 민심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국정수행 지지도 ‘30% 마지노선’ 붕괴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4월 27~29일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긍정 평가는 29%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60%, 의견 유보는 11%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내려간 것이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

(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대처 미흡(17%)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전반적으로 부족, 인사 문제(이상 5%) ▲독단적·일

방적·편파적(4%) ▲북한 관계,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리더십 부족·무능(이상 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도 모두 8개 분야 중 복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부정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긍정 평가 결과는 복지(48%), 외교(29%), 교육(29%), 고용노동(27%), 대북(24%), 경제(22%), 공직자 인사(14%), 부동산 정책(10%) 순이었다.

## ◆文, 지지율 악화에…‘직접’ 현안 점검

지지율이 갈수록 악화하자 문 대통령이 부동산이나 코로나19 등 현안을 직접 행기는 모습이다. 지난 4월 문 대통령은 정부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뿐 아니라 부패 척결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여러 차례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달리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백신 외교’도 직접 나섰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평화’나 ‘경제·통상 협력’뿐 아니라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2차 특별방역 점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안전성 논란 등 현안에 대해 재차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특별 방역점검회의에서 ‘백신 물량 확보 차원의 외교적 역량 총동원’을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백신 제조사 노바백스 스탠리 어크 최고경영자(CEO)와 직접 만나 공급 물량 확대 관련 논의도 했다. 특정 백신 안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부는 접종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는 한편,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국민취업지원제 25만명 수급… 57% ‘청년’

고용부, 취업 취약층 ‘실업부조 제도’  
월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제공  
내달 6일까지 ‘제도 홍보’ 영상공모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 지원 대상 중 절반 이상은 청년들이며, 이들이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에 27만 2374건의 신청을 받아 25만 1786건의 수급 자격을 인정했다. 이 중 청년이 약 11만 3000여명으로 57%를 차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는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참여자는 상담사와 1:1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성실한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1유형의 경우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2 유형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 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이 함께 제공된다. 현재 1 유형의 경우 17만 3531명 중 14만

8688명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세웠고, 14만 3107명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해 왔다. 또, 구직단념청년,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고용부는 더 많은 취업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5월을 국민취업지원제로 집중 흥보의 달로 정했다.

우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영상 공모전을 오는 3일부터 6월 6일까지 진행한다. /원승일 기자 won@

##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송영길

김용민·강병원 등 5명 최고위원 선출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송영길 후보(사진)가 당선됐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홍영표·우원식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전당대회 결과 당대표로 당선된 송 의원은 35.6%의 득표율을 얻었다. 당대표 후보로 도전한 홍영표(35.01%), 우원식(29.38%) 의원이 각각 뒤를 이었다.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도 선출했다. 당선자는 김용민·강병원·백혜련·

김영배·전혜숙 후보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득표율 1위는 17.73%를 얻은 김용민 후보다. 뒤이어 강병원(17.28%), 백혜련(17.21%), 김영배(13.46%), 전혜숙(12.32%) 후보 순으로 득표율을 기록했다.

강병원 후보(17.28%)와 백혜련 후보(17.21%), 김영배 후보(13.46%), 전혜숙 후보(12.32%)가 뒤를 이었다.

/최영훈 기자

**온·오프라인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200여개 홍삼브랜드 + 2만여개 인기상품  
복지몰과 웹카다로그를 통해 남녀 누구나 평생 판매 수익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사업  
25년 역사 브레이인TV 방송국 소유 햄터그룹  
(주)햄터라이프 T. 070-7204-4515

## 항공승무원 접종 동의율 59% ‘역대최저’

» 1면 ‘노쇼 백신에 몰리는’서 계속

### ◆예방접종 계획 수정해야

AZ 백신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노쇼 백신에 대한 수요는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19일부터 접종이 시작된 항공 승무원의 접종 동의율은 58.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수·보건교사 등 돌봄 종사자의 동의율도 67.3%에 그쳤다. 동의율대로라면 이들에게 배정된 백신의 40% 가량이 노쇼 물량으로 풀리는 셈이다. 노쇼 백신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계층은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접종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40~50대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임모씨(48)는 “해외 출장이 잦은데, 매번 오갈 때마다 검사를 받고 14일씩 자가격리하는 게 고역이었다”며 “빨리 접종을 받아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쇼 백신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AZ 백신이 아직 허가 혈전증이라는 부작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티이

다. 화이자 백신은 상반기 700만회분 도입이 확정됐지만 국내 도입된 물량이 아직 200만회분에 그쳐 노쇼 물량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정부는 백신 수급 문제로, 이달 75세 이상에 진행 중이던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의 위험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말하지만, 그게 개인적인 문제가 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팬데믹 초기처럼 중환자 관리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접종이 시급할 수 있지만, 지금은 백신이 더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백신별 접종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 교수는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빠른 접종이 필요하지만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반기까지 기다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백신 접종 계획을 합리적으로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